



의안번호

제74호

논 산 시 지 하 수 조 례 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1. 5. 17.

논 산 시 지 하 수 조 례 안

의안 번호	제74호
----------	------

제출연월일 : 2021. 5. 17.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논산시 지역특성에 맞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선진 지하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안 제3조~제7조)
- 다.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제18조)
- 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등(안 제19조~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원안 가결(참고3 참조)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3. 10. ~ 2021. 3. 31.(21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041-635-4482)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 산 시 지 하 수 조 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동력장치”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또는 전기설비, 계측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5. “케이싱(casing)”이란 지하수 굴착공이 매몰되지 않도록 굴착공 내부에 설치하는 견고한 재질의 파이프를 말한다.
6. “토출관”이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을 말하며, “토출관 직경”이란 양수를 위한 펌프의 몸체에 부착된 토출관의 직경(안쪽지름)을 말한다.
7.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펌프)의 능력, 설치 깊이, 효율 등을 감안하여 24시간 양수하였을 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론적인 최대 양수량을 말한다.

8. “보조관측망”이란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하기 위한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논산시 지역지하수 관측시설을 말한다.
9.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시장은「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내부 케이싱의 안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직경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지상에 설치하는 자동 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설치하는 때에는 수위측정관, 출수장치를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지하수 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 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 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행정시스템의 산정방법을 따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환경부령에서 정한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유가증권 등은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 등에 한정한다.

제5조(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관측망을 직접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보조관측망의 운영은 법 제5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 전문기관 또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6조(지하수개발·이용자 관리상의 책임)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지하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계량기의 매설, 지하수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④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르며 제반 공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0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논산시의회가 추천하는 논산시의회 의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6.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4.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업 및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6. 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7. 학교 및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8.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9. 생활용수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 하는 경우
10.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11.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채주입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산용 고지서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전월 분 미납액은 당월 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제19조제1항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이용량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으로 징수한다.

③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의 이용량 및 지하수의 이용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⑤ 시장은 고장 난 유량계를 이용자에게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지하수이용량을 산정한다.

제21조(납부의무자 변경 신청)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자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맑 은 물 과 장	김 봉 순
	팀 장	박 홍 식 (7 4 6 - 6 3 8 1)

[별표1]

지하수이용량 산정 기준

(제20조제6항 관련)

구 분	산정식(일사용량, m ³ /일)	비 고
일 반 용	$\{3.154 + (\text{양수능력} \times 0.023)\}$	
공동주택용	$\{7.130 + (7.2 \times 0.001)\}$ (100인 이하) $\{7.130 + (\text{급수인구} \times 0.001)\}$ (100인 이상)	
공 업 용	취수계획량	
기 타	취수계획량	

※ 양수능력, 취수계획량 자료는 지하수개발·허가 신고서 및 지하수시설관리대장 등에 기재된 자료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지하수 사용자 변경요청서 (제21조 관련)

[허가(신고)번호 :]

관정(부과대상) 지번주소		
변 경 전	사 용 자 (상 호) 명	
변 경 후	사 용 자 (상 호) 명	
	전 화 번 호	
	고 지 서 수 신 주 소 (도 로 명)	
	요 청 자 이 름	
변 경 사 유		

* 첨부서류 : 소유권 이전 등 변경을 증빙서류 등

20 년 월 일

논산시 장 귀하

※ 토지소유자 변경에 따른 지하수 ‘지하수개발·이용자권리·의무 승계’는 지하수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맑은물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조정 신청서					처 리 기 간	
					14일	
신 청 자	지 하 수 허 가 번 호 (또는 신고번호)					
	관 리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번호)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상 호 또는 건물명		
	대 표 자 성 명		업 태		전 화 번호	
신 청 내 용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p>「논산시 지하수 조례」 제22조에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조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논산시장 귀하</p>						
첨부서류 : 증빙서류 1부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4조(위원회 운영)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논산시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을 대상으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사항, 지하수 지역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자문 및 의견반영 등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함.

나. 추계결과

- 참석수당 : $100,000\text{원} \times 7\text{명} \times 2\text{회/년} = 1,400\text{천원}$

3. 작성자

맑은물과장 김봉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국 비							
기 금							
도 비							
시 비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세 출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 회의참석 수당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재원 조달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지방세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세외수입						
	공모사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삭제

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3.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

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2.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려면 관측망의 위치, 구조도, 측정 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보조관측망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망의 위치 및 구조도, 측정 항목 등을 명시한 관측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기본계획에 관측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관측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측망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구역이 제18조에 따른 수질측정망과 같은 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4.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인하여 흘러든 오염물질, 굴착 등으로 인하여 깨어진 물질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음용수로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②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적절히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참고 2

충청남도 및 도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단위 : 년도)

조례명	논산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계룡
○○○시·군 지하수조례		○(03)	○(07)	○(20)	○(08)	○(08)	○(06)	○(19)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3)	○(17)	○(07)			○(07)		○(09)

※ 11개 시·군 지하수 조례제정/ 우리시 포함 4개 시·군 미 제정
(2021. 02.현재)

참고3**규제심사 결과****2021년 제1회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인건별 의결목록**

의안 번호	의안명	의결주문	심의 결과	의결 유형	발의부서
제1호	「논산시 지하수 조례」 제정안 신설규제 심사 요청의 건	규제 신설	가결	11명 원안가결	맑은물과